

포장재의 환경 문제, 새 천년 해법을 찾자

Packaging Material of Environment a Question,
New Millennium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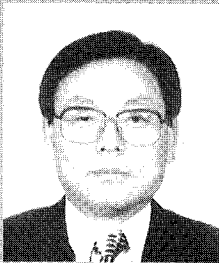
금년 한해는 포장재에 대한 정부의 사용규제 방침으로 업계와 정부의 뜨거운 논쟁의 연속이었다.

2월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1회용 봉투의 유료화와 1회용 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소의 확대, 이에 대한 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의 헌법소원 제기, 6월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통한 합성수지 재질 1회용 도시락용기의 사용억제 대상업소의 확대 방안의 공표, 이에 대한 도시락체인협회의 행정소송 제기, 10월에는 합성수지 재질 컵라면 포장용기의 사용 규제 방안의 공표, 이에 대한 라면업체들의 포장용기의 환경성 평가 자료의 공개와 이의 제기 등 정부 시책 또는 금후 방침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금년에는 정부의 특정 재질 포장재의 사용규제방침에 대해 포장용기 실수요업체인 식품 제조업체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에 환경부는 포장재 규제 강화 방침을 슬그머니 보류 또는 철회하였고, 규제단속을 담당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책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규제의 집행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이다.

왜 환경부의 1회용품 및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사용억제 정책이 집행단계에서 실패한 정책이 되고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비형태의 변화에 역행하는 직접규제 방식의 문제이다.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증대 등에 따라 소포장 간편식품의 수요가 필연적인데도 정부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단순한



직 주 섭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이사

목표로 특정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려 한 것이다.

둘째 포장의 기능성과 경제성을 무시한 환경규제 방식의 문제이다. 현대에 있어 포장은 상품의 보호, 수송, 보관, 하역의 편리성 및 판매 촉진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더구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농수축산품 및 공산품의 포장재가 모두 1회용 포장인데도 봉투와 도시락 포장용기만을 1회용 품으로 분류하여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은 포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는 쓰레기 매립시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장비가 두 배 이상 비싸면서 방수성 등 제품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종이 재질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도시락 제조판매업을 포기하던지 불법 행위를 감수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셋째 규제시책의 이해당사자들과 포장 전문가들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문제이다. 9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된 것처럼 환경부의 주요 정책 입안의 자문기구인 중앙환경보전위원회 폐기물부문위원회가 금년에 1회 개최하였으나 위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 폐기물관리 전문가들 뿐 포장학 또는 식품공학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1회용품과 식품 제조업체에게는 빨리 보내고픈 한해이지만, 내년에도 같은 일들이 반복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정부와 업계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한 폐기물 정책의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기적인 소비자운동을 통해 가능한 1회용 제품을 덜 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다회용 제품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포장의 기능성과 환경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기능성이 탁월하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업체에 재활용 책무를 더욱 강화하고, 기능성이 부족하지만 환경성이 양호한 것이 있다면 직간접적인 비용 보상을 도입하여 대체 제품간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포장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 포장재 생산업체와 이용업체, 폐기물 전문가와 포장 전문가가 머리를 마주보고 진솔한 재활용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2000년 4월부터 일본에서 모든 재질의 포장용기에 확대 시행될 예정인 일본의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의한 포장용기 재활용제도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특히 수년에 걸친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최종 합의되어 확정된 제도에 대해서는 업계가 모두 동참하여 이를 지켜 나가는 자세가 인상적이다. [ko]